

尹 “약자·서민 더 두텁게 지원”

새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미래 투자 등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새정부 첫 예산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639조원 규모의 첫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약자 및 서민 지원 △미래성장 등에 대한 투자 △강한 국방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등 약자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저소득 근로자 등 사회보험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쪽방 거주자 주거 이주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 원가주택 신규 공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위한 예산액을 밝혔다.

이어 “특히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전략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원천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에 편성된 △핵심 전략 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R&D 투자(4조9000억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3조6000억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농업 혁신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부문 예산과 관련해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 것”이라며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5조3000억원)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병사 봉급 130만 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도의회, 의원·사무처 직원 연찬회... 오늘까지 남원서

전북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25일부터 1박 2일간 남원 일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의 성과와 도의회의 발전방향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환경과 현 정부의 지역정책을 분석하고 도의회의 발전방향 및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김성수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를 초청해 “정밀한 의정활동, 부패방지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찬회가 도정운영 및 교육정책과 의회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소통하고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의원과 직원들이 소통하며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라며, “이후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25일부터 1박 2일간 남원 일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민주 전북 의원들, 특별자치도법 처리 건의

김교홍 국회 행안위 간사 찾아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홍, 윤준병, 신영대, 이원택 의원) 일동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간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날 오전 11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행안위 민주당 김교홍 간

사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하고 행안위 법안소위 처리와 공청회 실시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전략에 포함되지 못했고, 제주와 강원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 지위마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법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언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김교홍 간사는 “다음번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 공청회를 실시하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화답했다.

한편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전북의원들은 같은 달 25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찾아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를 건의한 바 있다. /김경수 기자

전북기업 ESG 확산 방안은?

도의회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회, 정책세미나 개최
모범사례 발굴·중기 맞춤형 정책 필요성 등 제시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을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회(대표의원 서난이)는 2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변호사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기업의 ESG 도입과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법무법인 영의 김도현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기업들의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설명하며 도내 중소기업에서의 ESG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로써 기업활동 전반에 미치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비재무적 지표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성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비나텍 황명구 상무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기업현장에서의 ESG경영 실무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황 상무는 “중소기업의 ESG환경 에너지 실무체계 구축을 위해 1인 1프라 구축 지원과 기업 모범사례 발굴, ESG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기금운

용본부의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중시하는 이유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에 있다”라면서 ESG경영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도 맞물려 있음을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동섭 전주중소기업협회장은 “ESG경영 도입에 있어서 도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등이 크다라면서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회 연구책임자를 맡은 권오안(원주) 의원은 “당장 기업의 이윤 추구가 대치되는 ESG도입은 도내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다라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비용지원과 교육,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구회 세미나를 주관한 서난이(전주) 대표의원은 “ESG는 기업의 투자유치 측면과 기업 신용도 제고, 핵심고객의 수요 관리,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 대응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정책연구 모임인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회는 서난이 대표의원과 권오안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나인권 농산경유회장을 비롯한 김희수, 김대중, 김동규, 오은미, 최형열 등 농산경유회장과 송승용, 김승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전주 관광거점도시사업, 차질 없이 진행을”

민주 김윤덕 의원

2020년 시작된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많은 기대 속에 시작되었던 관광거점도시사업은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국제관광도시, 전주, 강릉 목포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각 도시별·연차별로 진행되며 6개년의 사업으로 2020년도에 국비 총 159억 원을 투입해 시작되었으나, 도시별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2021년도에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2021년도 사업 추진에 전반적인 차질이 발생해 우려를 자아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차질없는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20년 12월에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전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순연된 바 있다”면서 일상 회복과 관광 재개를 위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주관으로 전주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문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행거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